

서평

강현조 | 『제국신문과 근대』가 이룬 성취와 남은 과제들

-김복순 외, 『제국신문과 근대』(현실문화, 2014)-

박정애 | 열정과 냉정 사이: 일본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나는 방법

-이시카와 이쓰코 지음, 손지연 옮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삼천리, 2014)-

【서 평】

『제국신문과 근대』가 이룬 성취와 남은 과제들

-김복순 외, 『제국신문과 근대』(현실문화, 2014)-

강현조*

1.

근대라는 개념은 ‘진보’ 혹은 ‘발전’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겨여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해 우리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근대를 진보-발전과 등가개념화하려는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 결과 과거를 당대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재단하려는 태도를 당연시해왔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은 학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초기매체에 대한 기존 연구의 시각 역시 ‘이 시기의 매체는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국민계몽과 공적 담론 형성의 수단’이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을 경우 대상의 객관적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일부만을 고찰한 결과를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예컨대 근대초기신문은 온전히 정론성에 기반한 공공 매체적 성격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당수의 신문사가 조선 정부, 더 구체적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개발지원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로는 왕실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았지만 이들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구독료·광고 수입과 같은 영업 이익 관련 항목이 자리잡고 있었다. 후자를 통한 이익 창출이 난관에 부딪칠 경우 신문사는 발행을 중지하거나 오랫동안 휴간 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신문에도 독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업적 기획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대중 매체로서의 성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지면 확대가 이루어진 광고, 선정성을 노정하고 있는 기사들의 적지 않은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소설의 연재조차도 이러한 기획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근대초기신문이 정론적 공공지와 상업적 대중지로서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자의 측면에 기반한 관점만으로 대상을 파악하려는 태도가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근대초기신문의 정론성은 해당 신문사의 경영진 내지는 집필진의 계층적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바, 출신지역·학문적 기반·신분적 지위 등이 달랐던 각 신문사의 운영진에 따라 신문의 대상 독자와 계몽 담론의 범위 및 속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민공동회 사건과 을사늑약, 국채보상운동과 항일의병 등 전국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한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 등 주요 한인(韓人) 발행 민간 신문들의 논조는 결코 단일한 층위로 수렴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 신문들은 동일 기간에도 저마다 중점 보도하는 사건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같은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분량·시각·어조 등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당대의 사회상 및 현실의 맥락을 더욱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논설 및 기사별로 매체 간 비교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근대 관련 제반 연구에서 이와 같은 신문 매체의 복합성과 신문들 간의 차이가 전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계몽의 수단이라는 측면에 주로 한정하여 신문을 바라본 결과 먼저

논설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연구의 문헌적 전거로서 압도적인 양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이 『독립신문』·『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근대초기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발행된 국문신문인 『제국신문』은 물론이거니와 발행 부수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대상인 『협성회회보(매일신문)』·『조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그리스도신문』·『만세보』·『대한민보』·『경향신문』·『경남일보』 등에도 적지 않은 논설이 실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앞의 3대 신문과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특정 신문 편중 현상을 결코 해당 신문의 대표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의의 결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하겠다. 게다가 논설 외에도 당대의 현실과 이에 대한 신문 필진의 입장 및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잡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대초기매체들이 특별히 주목한 사건은 무엇인지,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신문별로 어떠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잡보의 보도 대상 및 태도를 살펴보는 일은 이 시기의 현실을 입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관심사가 신문사의 ‘주장’에만 편향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관점의 정형화는 대상 선택의 폭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근대초기에도 이른바 ‘여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근대초기신문이 계몽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신문에 실렸던 연재소설 또한 계몽의 연장선상에서 활용된 미적 도구라는 효용론적 관점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전면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근대초기소설의 계몽적 성격에 대한 주제론적 분석이 이 분야 연구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는 신문연재소설이 독자 확보를 위해 매체에 의해 고안된 통속적 대중 서사라는 세계사적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한국의 경우도 본격적인 신문연재소설의 시대를 연 것은 분명 『만세보』의 <혈의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인 발행 신문 중 최초로 소설란을 개설한 것은 『대한매일신보』였으며 이 흐름을 곧바로 추수한 신문이 『황성신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매일신보』의 첫 연재작품이 국한문판임에도 순국문으로 집필되었으며 이른바 ‘절개를 지킨 창기(娼妓)’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청루의녀전>이었다는 사실, 『황성신문』의 <신단공안> 또한 백화문에 가까운 파격적인 문체로 살인·간통 등의 패륜을 다루거나 지배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전면화했다는 사실은, 소설란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았던 두 신문조차도 계몽 이념의 설과 목적에서라기보다는 독자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소설을 게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필자는 1906년 『대한매일신보』의 소설란 개설 후 이어진 각 신문의 소설 게재 붐(boom)은 매체 간 독자 확보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대중 서사로서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근대초기의 연구에 있어 신문이 당대인들의 생각과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특정한 관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대상 선택의 폭 자체를 좁혀 놓고도 그것을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당대에 대한 객관적 이해나 총체적 조명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선 여론 다양성의 존재 여부와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참조가능한 모든 매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 매체별로 충분한 비교 작업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통되는 지점과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과 함께 이 시기의 매체가 지닌 ‘공공재’적 성격뿐만 아니라 ‘상품’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대상에 대

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2.

『제국신문과 근대』는 필자가 지닌 문제의식에 비추어볼 때,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대단히 반가우면서도 고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대초기 관련 제반 연구에서 『제국신문』은 온당한 위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1차적으로 『제국신문』의 현전하는 발행분을 모두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접근성의 제약에 기인한다. 1898~1902년의 발행분은 오래 전인 1986년에 영인되었지만, 『제국신문』은 이른바 앞의 3대 신문과 달리 KINDS 등을 통한 원문파일 제공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1903~1907년 5월까지의 발행분은 최근까지도 전국 각 소장처에 산재해 있었고, 때문에 개인연구자들이 발품을 팔아야만 겨우 일부나마 접할 수 있었다. 이 발행분의 영인본이 출판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게다가 지면확장판이자 이해조의 신소설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근대초기소설 연구자들의 꾸준한 열람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1907년 5월 17일~1909년 2월까지의 발행분은 지면 훼손 우려로 인해 아직까지도 열람이 제한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그 동안 미공개 상태였던 이 기간의 발행분에 실린 논설이 자료집으로 발간되긴 했지만 소설·잡보·광고 등의 지면 열람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국신문』의 접근성 제약 상황은 이 자료에 대한 학계의 평가절하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제국신문』은 여타의 근대초기신문과 달리, 심지어 해외교포들이 발행한 신문들조차 발굴하여 제공해온 KINDS에서 원문파일 제공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지면 훼손 우려로 열람이 제한된 마지막 시기 발행분은 논외로 하고 왜 1903~1907년 5월까지의 발행분은 1차 영인본이 나온 지 25년만에야

비로소 영인될 수 있었을까? 특히 온라인과 영인본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시기의 발행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독립신문』·『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 이른바 3대 신문과 『제국신문』의 상황을 비교해볼 때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은 알기 어렵지 않다. 가장 오래 발행된 국문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초기신문 중 가장 많은 편수의 소설이 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컨대 가장 많은 편수의 독자 투고가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최고의 신문-독자 간 상호소통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신문』이 주목받지 못한 것은, 이 신문이 여성 및 노동자층을 주요 독자로 표명 혹은 상정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이나 여론 형성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추정, 정론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문을 굳이 일일이 찾아가며 참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다소 안이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아울러 서재필·신채호·박은식·장지연 등과 달리 이종일·정운복 등 기독교에 기반을 둔 서북 지역 출신 중인층이 주요 관여 인사였던 『제국신문』의 계층적·지역적 ‘주변성’ 또한 이러한 평가절하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면 억측일까?

필자는 『제국신문』을 평가절하 해 온 이유로 추정되는 ‘독자 및 필진의 주변부적 성격’이야말로 근대초기 및 이 시기 신문의 연구에 있어 『제국신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국가-정치-지식인-계몽-논설-남성 등으로 표상되는 이른바 3대 신문의 속성을 당대의 주류로 볼 만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주류적 속성이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거나 효과를 불러 일으켰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년센스임이 틀림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속성이 당대의 사회 및 구성원에게 가장 결정적인 파급력을 미친 동인이자 힘이었다고 간주하는 태도는 특정 매체 또는 그 매체 내부의 담론 수행 주체를 과대평가하거나 특권화하는 사고의 결과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3대 신문, 그것도 주로 논설에 한정되어 왔던 해당 신문의 언급만을 주요 전거로 삼아 근대초기를 이해하려는 ‘기획’은,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어떤 ‘의도’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제국신문』은 ‘독자 및 필진의 주변부적 성격’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역동성을 노정하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제국신문』은 이미 근대초기부터 당대인들이 다양한 여론 스펙트럼의 형성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고, 필진 스스로가 차별화 과정을 거쳐 상정한 독자층의 기대지평과 열망에 부합하는 담론 및 서사물을 제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각과 인식이 독자와의 부단한 상호 교섭 및 소통 속에서 비롯되고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국신문』의 매체적 역동성을 자료 자체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부터 도출해내고 있는 논문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국신문과 근대』는 우선 반갑고 동시에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3.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여성의 문화적 위치와 대중 독자의 감성”이라는 부제 하에 『제국신문』이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 및 이념의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논증한 글들이 수록되었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제국신문』이 호출한 여성 주체는 결코 ‘계몽된 국민이자 근대적 세계의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말로만 요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1부에서는 『제국신문』이 신소당과 윤효정 등으로 대변되는 양반 출신 지식인 여성의 선구적 근대화 담론이 제시되는 한편으로 과부·첩·무녀·기생 등으로 표상되는 약자·소수자적 위치에 있는 여성 주체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분출된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라는 점을 논증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찰 대상을 논설에서 기서·서사·잡

보로까지 확대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끊임없이 근대의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그러한 이념적 추구에 포섭되지 않는 타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전근대적 관점에 입각한 배제의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과 착종의 양상을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라고 언급한다. 이른바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적 혼재’ 양상이 『제국신문』의 지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1부의 대략적인 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이 시기를 단지 계몽의 시대로만 이해하려는 관점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열과 착종의 양상이 과연 『제국신문』에만 국한된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제2부에서는 “서사 양식과 글쓰기에 나타난 매체적 특성”이라는 부제하에 서사적 논설·소설·유학생 기서·여성 관련 기사 등 『제국신문』을 통해 등장했던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새로움과 근대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행하고 있다.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적 환경은 기존의 글쓰기 방식에 일정한 자극을 줌과 동시에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해당 양식의 집필을 맡았던 필진의 세계관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이나 계몽 담론의 지형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여타의 신문에서도 논설·소설·기사 등의 양식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제국신문』의 특수성이 반영됨으로써 노정된 차별성에 착목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유사한 소재와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매체에 실리는가에 따라 주제와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2부에는 학계 최초로 미공개 『제국신문』 발행분에 연재되었던 이해조 소설의 의미망을 탐구한 논문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제3부에서는 “근대 ‘지’의 담론과 매체-독자 간 상호 교섭”이라는 부제하에 『제국신문』의 논설 및 여성 독자 투고에 나타난 학문-사상-계몽 등 근대 ‘지’ 담론을 고찰한 논문들과 함께 『제국신문』의 창간 과정과 광고면의 성격 등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 그리고 역시 미공개 『제국신문』 발

행분의 논설을 주로 집필했던 정운복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수행한 글 등이 실렸다. 3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제국신문』이 여타의 신문들에 비해 독자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참여한 독자들의 견해를 수용하거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인 기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대한 편집진의 인식이 “매체-독자 간 상호 교섭”이라는 명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논문마다 발표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3부를 통해 『제국신문』의 창간 당시부터 가장 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논설 및 담론의 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적 고찰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크나큰 효용 중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지금까지 일별한 내용을 고려해볼 때 『제국신문과 근대』는, 근대초기 및 신문의 연구에 있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자료인 『제국신문』을 접근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고찰한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학계의 귀중한 결실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발간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근대성 연구가 일반론적이고 보편적인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과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며, ‘하나이지 않은’ 근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연구의 독자성과 개별성 확보는 학계가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특정 신문에 편중되어 있던 기존 근대 연구의 경향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다만 대상 자체가 이른바 ‘여성 신문’으로 규정될 만한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제국신문』에 대한 학적 관심이 ‘여성’이라는 코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의 언론기관이라는 속성을 갖는 동시에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형태로 실재했던 신문의 ‘상품’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

에서 『제국신문과 근대』는 매체별 연구의 독자성과 개별성 확보라는 과제에는 충실히 부응하고 있지만 매체 간 비교 고찰을 통한 당대적 현실의 객관적·입체적 조명이라는 요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매체 내부에서 노정된 계몽 담론의 차이와 균열의 지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동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는 신문의 상품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수반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필자는 기획주체인 근대초기매체연구회가 이 점을 모르지 않으리라고 보며, 아마도 이러한 미결 과제들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고 또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미 연구논문집 제2권의 출간을 예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를 위한 자료 확보의 차원에서 이어지게 될 미공개 『제국신문』 발행분의 소설·잡보·학문론 편찬 작업,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속될 『제국신문』 관련 연구의 산출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바, 근대초기매체연구회의 우보천리(牛步千里)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기적을 낳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